

군사작전에 관한 언론보도 유감

- 강릉사건을 중심으로 -

안 광 식

이화여대 명예교수 · 중재위원

비가 내리던 2월말의 어느 날 오후에 용산에 위치한 국방회관내의 오붓한 한 회의실에서 한국전략문제 연구소 주관으로 중견 언론인·고참 언론학교수 몇 명과, 국방부·연합참모본부·3군정훈공보담당참모 등 10여명이 「군사작전과 언론보도」라는 주제를 갖고 비공개리에 강릉간첩사건을 중심으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토론회는 비공개로 진행되었지만 진지하게 전개된 토론내용들이 군사기밀에 관한 것도 아니고, 일반에게 공개되었다고 해서 군이나 언론의 체면과 명예가 손상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오히려 군사작전의 언론보도에 관하여 군이나 언론이 강릉사건을 거울삼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고 생각되어 토론의 골자를 이 란에서 개진해 보려고 한다.

무엇보다도 강릉사건과 관련하여 군과 언론이작전과 보도과정에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상반된 관점에서 마찰과 갈등을 빚었다는 것은 심히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사건에 관한 언론보도와 군의 언론대책이 부분적으로 국가이익에 좀 위배되는 결과도 가져왔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한 일이었다.

군 쪽은 주제발표의 문제제기에서 "군은 공비소탕작전을 시작하면서 언론보도가 어떤 형태로 이루어 질지, 어떤 파문이 야기될지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수백명의 기자들이 첨단기술과장비를 갖추고 작전현장에 투입되어 맹렬한 취재활동에 나서자 이에 대한 대비가 없었던 작전부대는 속수무책에 빠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토론했다.

강릉사건에 대한 언론보도는 초기부터 비판적이었으며 군에 대하여 부정적 여론을 형성시켰다. 잠수함을 발견하지 못한 해안경비상의 허점에 대한 비판으로부터 시작하여, 택시기사의 군부대 신고 접수 거부내용, 초동 조치지연 보도 등으로 현지부대는 작전 전개 처음단계부터 언론의 몰매를 맞았다.

그리고 초기의 적 사살 및 생포기간을 제외하고는 작전상황의 담보에 따라, 언론이 주민제보와 경찰첩보 등에 의존하여 보도한 결과, 오보를 적지 않게 발생시켰다고 보여진다.

우리가 짐작으로만 여겨왔던 오보의 내용은 민간인(신남중학교 교사)의 신고에도 불구하고 군이 3일간이나 수색 작전을 하지 않고 신고를 묵살해 버렸다는 것과, 공작원 2명이 군축령 매운탕집에서 점심을 먹고, 스키장 전자오락실에서 잠을 자고 갔다고 보도한 내용들이 있다.

군의 불만은 또한 과도한 취재인원이 현장에 투입되어 무질서한 취재경쟁을 벌이고 그 과정에서 추측보도, 미확인 보도가 적지 않게 전달되어 "군 작전의 대국민 신뢰성을 저하시켰고 작전수행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군측의 주장은 "아군 투입 병력규모, 작전기도, 차단선 및 봉쇄선 위치, 예상 도주로 등이 여과 없이 보도되어 공비들의 도주를 도와준 측면이 없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군은 강릉작전과 관련하여 언론의 오보 때문에 "국민들이 군을 불신하고 안보문제에 불안감을 갖게 만든 불행한 사건이었다"고 호소하였다.

한편 기자들의 불만은 합동보도본부 브리핑에 알맹이가 없었다는 것과 기자들이 이미 알고 있는 사항까지도 아는 바 없었던가 또는 확인도 하지 않고 무성의하게 답변하여 경찰첩보나 주민제보에 의존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군사작전에 관한 언론보도의 명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는 언론이 군사작전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하기 때문에 작전에 관해서 진실을 알려줄 의무와 책임이 있다. 둘째는 군사작전에 관한 보도가 국가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관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난번 강릉사건의 언론보도가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주었는지, 그리고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보도가 되었는지에 관하여 의문의 여지가 많았다고 보인다.

강릉사건과 관련하여 몇 가지 측면에서 종합을 해보면, 첫째로 이번 사건에서 군이 얻은 교훈은 군이 군사작전과 관련하여 과거 30 여년 동안 안보라는 미명 하에 보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왔기 때문에 이에 안주해 왔으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고 언론환경이 달라지면서 심지어 가벼운 군사기밀 또는 국가안보와 관련된 군사작전까지도 성역이 아니고 언론보도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둘째로 군의 언론대책이 서툴렀기 때문에, 그리고 보도자료제공이 미흡했기 때문에, 언론이 민간정보와 경찰정보에 의존하여 보도하고 그 결과, 오보를 초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군이 중대한 군사기밀이 아닌한 정보를 감추거나 또는 제공하지 않으려는 소극적 홍보정책에서 벗어나 군이 오히려 많은 보도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방향으로의 전환이 요청된다.

군 뿐만 아니라 어떤 뉴스원을 막론하고 정보제공의 과소현상이 보도상으로 추측, 비정확성, 왜곡, 과장, 조작성 등을 유발할 우려가 있다.

세번째는 언론의 과도한 취재경쟁으로 인한 무질서는 큰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제기되는 언론의 문제점이다. 강릉사건에서도 예외가 아니었으며, 앞으로 군사작전 보도시에는 보도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풀 시스템의 고려와 그밖에 자율적·타율적 제한 조처가 요청된다.

넷째는 군사작전에 관한 언론보도는 재론의 여지없이 국가이익의 차원에서 수행되어야 한다. 아무리 언론자유가 강조된다고 하더라도 치열한 상업주의 경쟁의 와중에서 부지중에 적측에 작전상 유리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보도경쟁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을 뿐더러 결과적으로 국가이익에 해가 되는 행태라고 지적된다.

다섯 번째로 군사작전에 관한 「오보」는 군사작전상 또는 대국민감정상 중대하고 심각한 오류를 범할 우려가 있다고 보인다. 언론과 군의 양측이 잘못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를 즉시로 수행하지 않을 때 작전진행과정에서 발생할지도 모를 사태의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하여 국가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지난번 강릉사건의 작전과정에서 발생한 오보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이 중재위원회에 단 한건도 없었다는 것은 국민이 올바르게 알아야 할 권리를 군이나 언론이 무시해 버린 결과를 빚었다는 관점에서 유감스러운 일이었다.

강릉사건의 교훈은, 언론과 군이 엄청나게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조류에 보조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며, 이제는 과거의 보도방식과 대언론 정책의 관습에서 벗어나 군과 언론 모두가 새로운 사고로의 전환을 필요로 한다는 점이다.